

베네수엘라 차베스정부의 국유화 정책과 국민여론*

조돈문**

단독/가톨릭대학교

Cho, Don-Moon (2011) "Nationalization Policy and Public Opinion in Venezuela"

ABSTRACT

The politics of nationalization tended to evolve in the mode of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apitalists as the Chávez government began to push ahead with its nationalization policy after winning a referendum in February 2009. Once nationalization measures came to reach the food industry which in turn further sharpened socio-political conflicts, the tide of public opinion began to exercise influence on the form and direction of nationalization policy. However, public opinion on the nationalization policy has not been well studied by social scientists.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analyze public opinion on the nationalization policy, and identify significant causes and causal mechanisms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so as to make sense of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strategic choices made by the protagonists of nationalization policy.

This study of public opinion came up with three findings. First, an overwhelming majority are in opposition to the nationalization policy, siding with capitalists in their confrontation with the government. Second, Chávez's reputation exerts greater influence on public opinion about the nationalization policy in comparison with the capitalists' reputation, a factor with countervailing effect against the capitalists' edge in reputation. Third, among the various explanatory variables the evaluation of Chávez's performance turned out to be most influential, while not only Chávez's evaluation but also his ideological orientation has exerted significant effects on citizens' opinion about the nationalization policy.

The current tide of public opposition to the nationalization policy demonstrates the failure of the Chávez government to form a national

* 본 연구는 2010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M-2010-B0002-00069)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허락한 Datanalisis,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논평가들, 그리고 조교 김직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 Don-Moon Cho is professor of sociology at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Email: chodon333@gmail.com).

consensus on the issue of nationalization. It implies that calls for nationalization based upon the need to deal with poor working conditions, violations of basic labor rights, the problem of industrial monopolies, the possible consequence of productivity improvements, and the public good and workers' control fell short of convincing the Venezuelans of the inevitable need for nationalization measures.

The failure of the Chávez government to form favorable public opinion largely owes to the strategic choices made by Chávez and his government. They chose to take advantage of Chávez's high popularity which far exceeds the proportion of public opinion in favor of nationalization policy. They intended to persuade Chávez's supporters to endorse Chávez's transformative policies such as the nationalization policy rather than to engage in dialogue with those who give low approval ratings to Chávez. It was a rational choice for their strategy. However, this typical dichotomization strategy could make it difficult to build up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nationalization policy because it could alienate those who don't give a positive rating to the performance of the Chávez government. As a result, the nationalization policy may face serious national resistance as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Venezuelan society intensifies further.

Key Words: Venezuela, Chávez, Nationalization, expropriation, popular opinion, basic industry, food industry, capitalist, labor union, dichotomization strategy / 베네수엘라, 차베스, 국유화, 점유, 국민 여론, 기간산업, 식품산업, 자본, 노동조합, 양분전략

들어가는 말

베네수엘라 차베스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유화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정권전복을 겨냥하며 2001년부터 시작된 직장폐쇄·총파업 공세 속에서 상당수 공장들이 폐쇄·가동중단 사태를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마비와 경제위기가 야기되면서부터였다. 그 과정에서 공장폐쇄와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을 전개하던 노동자들이 국유화를 요구하면서 일자리 지키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유화 조치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2005년 초에는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하며 일부 폐쇄기업들을 국유화하여 공동경영으로 전환하면서 국유화 조치는 이념적 변혁성의 표상인 공동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게 되었다. 하지만 국유화 정책은 2006년 말 대선과 이후 정권재창출을 둘러싼 헌법개정 국민투표 등 정치일정으로

인해 소강상태를 거친 다음 2009년 2월 국민투표에서 차베스가 승리를 거두고 나서야 다시 공세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유화 정책이 다시 활성화되며 폐쇄기업이 아니라 정상가동 중인 기간산업 업체들로 확대되고 이어 식품산업의 초대형 업체들을 표적으로 삼자 식품산업 자본이 거세게 반발하며 국유화 정치의 양대 행위주체인 국가와 자본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가와 자본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띠게 되면서 국유화에 대한 국민여론의 분포가 국유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도 더 커졌다. 차베스가 국유화를 추진하며 베네수엘라 인들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강한 지지자는 10%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한 것도 국유화 정책이 국민여론을 예의주시하며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acn.com.ve 2011.04.04). 하지만 2003년 Datanalisi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인들의 절대 다수인 82.8%가 바람직한 사회경제체제로 자본주의를 선택한 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각각 14.6%와 2.6%에 불과했다(조돈문 2010)는 점에서 차베스의 10% 주장의 신빙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국유화에 대한 국민여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론분포를 발표하는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국유화 여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적 연구¹⁾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식품산업의 국유화를 중심으로 국유화에 대한 국민여론의 분포를 확인하고, 국유화에 대한 시민 여론이 어떤 원인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유화 추진 주체의 전략적 선택의 배경과 함의를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유화의 정치와 연구방법

국유화 정치의 부침

차베스정권 초기 정권전복을 위해 자본 측이 반차베스 노동진영과 함께 일련의 총파업·직장폐쇄 투쟁을 전개하면서 생산중단 사태가 반복되며 장기화되자 공장들의 부도·폐업·가동중단과 함께 정리해고가 단행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생산중단과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국유화를

1) 국유화 및 공동경영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조돈문(2011)을 참조할 것.

요구하면서 국유화 조치가 진지하게 검토되기 시작했다. 2005년 초 차베스가 공동경영을 21세기 사회주의의 표상으로 부각시키며 Inveval과 Invapal을 국유화하여 공동경영으로 전환하고 유희상태의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 국유화를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공포하면서 국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차베스정부는 2004년 8월 15일 차베스소환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며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2005년 12월 야당의 총선 보이콧에서 보듯이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야당이 정권전복 전략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으로 선화하자 차베스정부는 2006년 12월 대선에 집중하였다. 대선 승리 뒤에는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여 2007년 12월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 국민투표를 추진했고, 국민투표에서 패배하자 2009년 2월 연임제한 철폐 대상을 대통령에서 주요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하는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유화의 추진 주체인 차베스와 정부는 정권 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매진했고, 그 결과 국유화 정책은 소강상태를 맞게 되었다.

국유화 조치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2월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차베스가 승리를 거둔 뒤부터였다. 실제 사적소유 기업의 국유화 조치는 2005년에 5건 실행된 다음 2006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22건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118건으로 폭증하여 이전 4년 간 실시된 국유화 건수의 네 배가 넘었다(표 1 참조).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국유화 조치도 2009년 들어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사유재산 점유 조치가 공세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표 1. 사유재산 점유 건수 (2005-2009)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사기업	5	0	8	14	118	145
농지 및 시설	18	19	113	189	283	622
부동산	9	157	120	33	33	352
합계	32	176	241	236	434	1,119

자료: “observatorio de la propiedad privada”(El Nacional, 2010.07.26).

이미 2008년 4월 차베스가 수년간 분란을 겪던 철강기업 Sidor의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공세적 국유화의 가능성이 점쳐지기 시작했다. 국유화 조치는

2009년 들어 공세적으로 추진되면서 석유산업과 비석유 기간산업들로 확산되었다.²⁾ 이렇게 국유화된 사기업체들로는 초대형 국유 석유기업 PDVSA의 초국적 석유산업 협력업체들뿐만 아니라, 비석유 기간산업의 아르헨티나계 철강업체 Sidor, 전화통신 업체 Cantv, 멕시코계 시멘트 생산업체 Cemex, 건설자재용 철강 생산업체 Sidetur, 그리고 스페인계 은행 Banco de Venezuela 등 금융산업으로도 확대되었다.

이렇게 2009년에 본격적으로 재개된 국유화 조치는 Inveval-Invepal이 국유화되던 2005년을 전후한 초기의 국유화 과정과는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³⁾ 첫째, 초기의 국유화 대상 기업은 총파업·직장폐쇄에 따른 부도·폐업 등으로 생산이 중단된 기업들이었으나, 2009년 이후 국유화 대상 기업은 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이었다. 둘째, 초기에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을 전개하며 국유화를 요구한 다음 정부가 개입하여 국유화조치를 실시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투쟁 동원 없이 차베스가 특정 사기업체의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정부 주도의 국유화 조치가 추진되었다. 셋째, 초기의 국유화 기업들은 정부와 노동자의 공동소유에 기초한 공동경영으로 전환된 반면, 2009년 이후 국유화된 기업들의 경우 주로 소유권 참여 없는 노동자 경영참여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실질적인 노동자통제를 요구하는 노동자 투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경영참여 수준의 후퇴를 반영한다.

‘과야나 사회주의 계획’과 식품산업 국유화

2009년 2월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다음, 차베스는 5월 21일 과야나 주 기간산업단지의 노동자들과 가진 워크샵에서 6개 제철·철강 업체들의 국유화 및 생산과정의 노동자 통제 추진 계획을 선언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정치교육의 중요성과 무장한 노동자 군대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유화의 정치를 공세적으로 시작했다. 워크샵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주로 집권정당 PSUV 소속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6월 9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국면을 계기로 활용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9가지 전략을 제출했고, 차베스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제안에 기초하여 7월 22일 ‘과야나 사회주의 계획’(Plan Socialista

2) 국유화의 대상 및 과정에 대해서는 Fuentes(2008; 2009a), Wilpert(2011, 2-3), Reardon(2010b)를 참조할 것.

3) 국유화와 공동경영 전환의 내용 변화에 대해서는 *El Nacional*(2009.03.08; 2010.07.26), Fuentes(2008), 조돈문(2011)을 참조할 것.

Guayana 2009-2019, 이하 과야나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⁴⁾

차베스정부의 국유화와 공동경영 전환 정책은 마스터플랜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⁵⁾을 받아 왔었는데, 과야나계획을 통해 비로소 변혁적 지향성에 입각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동 계획의 핵심적 내용은 과야나주 국유기업집단 CVG(Corporación Venezolana de Guayana)를 사회주의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서, CVG는 과야나주의 철광, 철강, 알루미늄 등 기간산업의 15개 국유기업, 8만 명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 계획은 이들 기업들을 생산에 대한 노동자들의 직접적 통제, 노동조건 개선, 공적 감사를 통해 민주적 계획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차베스는 동 계획을 발표하며 베네수엘라 국유기업들이 국가자본주의의 틀 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의한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위대한 사회주의 지대를 여기에 건설할 것”(Pearson 2010, 24)이라고 선언했다. 동 계획의 발표 이후 10개월이 지난 2010년 5월 15일 차베스는 Venalum, Alcasa, Sidor 등 CVG 소속 8개 국유기업들에 대해 노동자들이 선정한 사장을 임명하며 노동자통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했으나, 동시에 CVG 업체들의 고위직들에 여전히 혁명의 적들이 남아있다고 비판함으로써 사회주의 기업으로의 전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인정했다.

2009년 2월의 국민투표 승리 이후 차베스정부는 과야나계획과 함께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차베스 정부는 국유화 대상도 기간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식품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 커피농장 등 농지와 농업시설물들에 대한 점유는 2007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는데, 2009년 들어 식료품의 생산, 가공, 유통에 관여하는 주요 대기업들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Éxito, Agroisleña, Compañía Inglesa, Sociedad Mercantil Molinos Nacionales, Refinadora de Maíz Venezolana 등이 국유화되었다.⁶⁾ 식품산업의 국유화 조치는 마침내 대규모 식품산업 기업 집단인 베네수엘라 최대 재벌그룹 Polar와 포르투갈계 초국적그룹 Cargill의 산하 기업들로 향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며 여론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4) 과야나계획과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Fuentes(2009b), Albrecht(2009), Pearson(2010), Larsen(2010)을 참조할 것.

5) CCURA(2006), Peralta(2008), Lanz(2005; 2007), Janicke(2007b)를 참조할 것.

6) 2009년 이후의 식품산업 국유화 조치에 대해서는 *El Nacional*(2010.05.24; 2010.07.26), Cruelles(2010), Reardon(2010a)을 참조할 것.

주요 식품산업 업체들의 국유화 조치는 차베스의 선언에서 시작되었다. 예컨대 차베스가 Aló Presidente 프로그램에서 국유화 대상 업체들을 호명하며 “소유주들에게 전화해서 장관과 부통령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 이제 국유화 한다. 하루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www.globovision.com 2010.10.04)고 선언하면서 해당업체의 국유화 절차가 시작된다. 국유화 조치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으면 당사자 및 국민여론의 설득보다는 지지 세력의 동원 전략을 택했다. 차베스가 2010년 10월 25일 국유화를 선언한 다음 해당 업체의 소유주와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부통령 하우아(Elías Jaua)가 10월 27일로 예정된 국유화 지지 집회에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던(Reardon 2010a) 미국계 식품 용기 제조업체 Owens-Illinois의 국유화 경우가 그 좋은 예다.

정부가 제시하는 국유화 조치의 법적 근거는 헌법(Constitución 1999), 수용법(Ley De Expropiación Por Causa De Utilidad Pública O Social 2002)과 식량주권법(Decreto Con Rango, Valor Y Fuerza De Ley Orgánica De Seguridad Y Soberanía Agroalimentaria 2008)이다.⁷⁾ 헌법 제115조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사유재산의 수용은 사회공공성(utilidad pública o interés general), 법원의 확정판결, 적절한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수용법 제7조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 산업에 적용되는 식량주권법은 제2조와 제3조에서 “농식품 산업의 경우 농식품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강제수용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품질과 분량의 식품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공공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베스와 정부가 국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논리⁸⁾는 베네수엘라 사회의 경제적·생산적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유화가 불가피하며, 식품산업의 경우 생필품인 식품이 상품화되어 이윤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 식품은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산업은 소수 초대형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그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품 생산업체는 생산량의 70%를 고정가격제 생산품을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식품 유통업체는 사재기와 생필품

7) 헌법 및 관계법은 www.tsj.gov.ve/legislacion, www.gobiernoenlinea.ve/docMgr, www.acienpol.com/CIJ를 참조할 것.

8) 정부측의 식품산업 국유화 정당화 논리에 대해서는 Fuentes(2009a), Reardon(2010a), Abajo firmantes(2010), Navarro(2010)를 참조할 것.

공급 제한 등의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며 Polar와 식품산업협회(Cadiveca)는 정부 검사관들이 조사 명목으로 사무실과 공장을 방문한 사례가 2010년 상반기만 해도 200차례가 넘었고 2010년 5월 물류창고에서 114톤의 식품을 몰수당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의 수용 조치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⁹⁾ 정부가 식품의 생산·가공자로서 어떤 부문들에서는 이미 생산의 50%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은 없고 어떤 업체도 시장에서 식품의 가격이나 공급량을 결정할 힘을 지니지 못하며, 식품산업은 원재료 가격이나 생산품 가격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고 생산량도 정부에 의해 할당되고 있을 정도로 지나친 정부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유화 절차¹⁰⁾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사회공공성의 법정판결 없이 점유절차를 시작하고, 평가담당 전문가들이 합의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또한 정부가 점유한 식품업체들이 대부분 인건비 상승, 생산성 하락, 경영 비효율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자본의 비판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은 국유 식품유통 부문의 실패였다. 정부는 기존의 국영 식품체인 Mercal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완전한 식량주권을 위해 2008년 PDVSA의 계열사로 PDVAL을 창설했다. PDVAL이 2009년 수입한 23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식품은 부패하여 전혀 배분되지 못했고, 2008년 초 시가보다 68%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5천 톤 분의 육류를 구입했지만 식품은 도착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에 2,470만 불을 지불하여 타 업체가 제안한 가격에 비해 1,470만 불을 더 지급했고, 2008년 상반기에 외국으로부터 식품 100만 톤을 구입했지만 25%에 불과한 26.7만 톤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¹¹⁾

식품산업의 경우 여타 산업에 비해 국유화 조치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이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Polar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¹²⁾ Polar의 Lara주 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의 수용 조치를 용납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9) 자본측의 식품산업 국유화 비판에 대해서는 *El Nacional*(2010.07.26), *El Universal*(2010.10.29; 2010.11.04; 2011.01.19), *Economist*(2010.06.12)를 참조할 것.

10) 식품산업을 넘어선 산업 일반의 국유화 절차에 대한 자본측의 위헌·위법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Canova(2009)와 조돈문(2011)을 참조할 것.

11) *El Nacional*(2010.07.28; 2010.07.29)과 *Economist*(2010.06.12)를 참조할 것.

12) 노동조합의 국유화 조치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El Universal*(2010.10.23), www3.dinero.com.ve(2010.03.07)를 참조할 것.

일자리와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며 Polar와 Cargill의 식품산업 업체들이 국유화되어야 한다는 식품부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Polar의 Carabobo주 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수용한 기업들 가운데 긍정적 성과를 낸 곳이 없다며 정부의 어떠한 점유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Polar 산하 업체 노동조합들의 반발에 호응하며, 반차베스 CTV 사무총장 Froilán Barrios는 국유화와 공동경영은 국가경제를 재조직하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없고, 정부의 국유화 정책은 실업 감축이나 빈곤 퇴치의 효과가 전혀 없는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행위에 불과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절한 보상도 하지 않는 사유재산 침해 행위라고 국유화 조치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같이 과야나계획은 국유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 반발 없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식품산업 국유화에서는 재벌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자본측과 CTV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들의 연합세력에 의한 거센 반발로 인해 차베스정권 초기의 정부 대 자본·노동 연합세력의 대립구도가 재현되고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차베스정권의 불안정성과 지지기반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최대 여론조사기관인 Datanalysis가 2009년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동 설문조사는 베네수엘라 전국의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집락표집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사례수는 1,300명이다. 동 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차베스정부가 2009년 2월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승리하고 기간산업 대상으로 국유화 조치를 공세적으로 시작한 뒤이다.

동 설문조사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식품산업 국유화에 대한 구체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국유화에 대한 여론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정부는 Monaca, Cargill, Polar 같은 식품 생산·분배 부문의 대형 사기업들을 점유하는데 귀하께서는 동의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찬성하면 +1, 반대하면 -1, 중립적이면 0의 값을 주어 ‘국유화의견’ 변수를 만들어 국유화 여론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국유화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일련의 설명변수들을 형성했는데, ‘계층위치’는 베네수엘라의 여론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5개 범주 사회경제계층

변수를 상위층(A-C), 중간층(D), 하위층(E)의 세 범주로 축약한 것이다. “어떤 사회에 사는 것이 더 나은가”라는 물음에 “어느 정도 사회적 불평등이 있더라도 모든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를 선택하면 보수성향으로 분류하여 -1의 값을 주고, “어느 정도 자유의 제한이 있더라도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선택하면 진보성향으로 분류하여 +1의 값을 주고, 중립적 응답은 0의 값을 주어 ‘이념지향’ 변수를 만들었다. 베네수엘라 사회의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를 치안문제로 답하면 +1, 기타 응답은 0을 주어 ‘사회문제인식’ 변수를 만들었다.

동 설문지는 “아래 부문 혹은 기관의 활동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차베스 대통령, 야당, 자본가, 노동조합 등 일련의 기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기초하여 ‘차베스평가’, ‘야당평가’, ‘자본평가’, ‘노동조합평가’라는 변수들을 만들었다. 해당 기관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하면 +1, 못한다고 평가하면 -1,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면 0의 값을 주었다.

식품산업 국유화와 국민 여론

국민 여론과 설명 변인들

식품산업 대기업들의 국유화에 대한 여론 분포는 반대가 65.5%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립과 찬성으로 17%씩 반분되어 있어(표 2)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의 네 배 가까이 된다. 이처럼 국민여론은 국유화 정책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국유화 정책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식품산업 국유화에 대한 국민여론 분포

구 분		빈 도	퍼센트
국유화의견	반 대	851	65.5
	중 립	222	17.1
	찬 성	227	17.5
	합 계	1300	100.0

식품산업 국유화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변인들로는 기득권 보유 여부를 보여주는 '계층위치', 베네수엘라 사회를 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사회문제인식', 바람직한 사회모델로 표현된 진보-보수의 '이념지향', 차베스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나타내는 '차베스평가'를 꼽을 수 있으며, 설명변인의 범주별 국유화의견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명변인의 범주별 국유화의견

설명변인/범주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계층위치>			
ABC 상위층	-.6972	109	.65975
D 중간층	-.4316	95	.80758
E 하위층	-.4597	385	.75282
비해당,무응답	-.4738	648	.79756
전체	-.4859	1237	.77533
하위층 - 상위층	.2375		
<사회문제인식>			
기타문제	-.4732	579	.76055
치안문제	-.4854	721	.78537
전체	-.4800	1300	.77414
치안문제 - 기타문제	.0122		
<이념지향>			
보수성향	-.6145	773	.70996
중도성향	-.4112	214	.71802
진보성향	-.1949	313	.87543
전체	-.4800	1300	.77414
진보성향 - 보수성향	.4196		
<차베스평가>			
부정적평가	-.9402	351	.27121
중립적평가	-.6420	419	.60757
긍정적평가	.0283	459	.90683
전체	-.4768	1229	.78700
긍정적평가 - 부정적평가	.9685		

계층위치별 국유화의견은 상위층과 중-하위층으로 양극화되어 있으나 그 차이는 2점 범위의 척도에서 .2375에 불과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층에서 국유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며, 보호할 사유재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위층으로 갈수록 국유화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하위층에서도 찬성의견 20.1%에 비해 반대의견이 61.7%로 3배가 넘어서 국유화 찬성층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국유화가 하위층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직접적 혜택도 주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찬성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인의 55.5%가 현 국면의 베네수엘라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치안문제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치안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과 기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 국유화의견 차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유화에 대한 입장이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뒤집어 보면 국유화 여부가 베네수엘라의 핵심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적으며 그런 이유로 일반 시민들은 국유화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념지향에 따른 국유화의견 분포를 보면 진보성향 시민이 보수성향 시민에 비해 .4196만큼 국유화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하위층과 상위층 사이의 국유화의견 차이에 비해 이념지향에 따른 국유화의견 차이가 두 배 가까이 크게 나타난 것은 개인이 처한 구조적 조건보다 각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적 모델이 더 중요하며, 국유화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득실보다 국유화로 인해 이루게 되는 미래 사회의 모델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국유화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보여주는 집단들도 반대의견의 원인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상위층의 경우 사유재산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면, 보수성향의 경우 사유재산권 원칙의 침해 자체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유화의견은 차베스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평가자와 부정적 평가자 사이의 차이는 .9685로서 2점 범위 척도의 절반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립적 평가자들의 국유화의견이 긍정적 평가자보다 부정적 평가자에 가깝다는 것은 전반적인 국유화 반대 여론 속에서 차베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사회적 합의로부터 이탈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런 만큼 국유화의견은 정치적 입장의 결과물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명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검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¹³⁾ 사회문제인식과 계급위치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차베스평가와 이념지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차베스평가와 이념지향은 모두 .000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표준화계수와 t값에서 차베스평가가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표 4. 국유화의견의 회귀분석

설명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74	.097		-2.834	.005
차베스평가	.483	.026	.497	18.889	.000
사회문제인식	-.047	.039	-.030	-1.201	.230
이념지향	.113	.023	.123	4.821	.000
계층위치	-.050	.036	-.211	-1.385	.166
계층더미	.209	.237	.133	.881	.378

회귀분석 결과는 설명변인의 범주별 국유화의견 분포와 상응하고 있다. 국유화의견에 있어 사회문제인식 범주들 사이의 차이는 없었고, 상위층-하위층의 차이는 .2375로 나타났는데, 진보-보수 성향의 차이는 계층간 차이 값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4196이었고, 차베스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와 부정적 평가자의 차이는 .9685로서 진보-보수 차이의 두 배가 넘었다. 그 결과 모든 설명변인의 범주들이 ‘-’ 값을 지녀 국유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준 반면 유일하게 ‘+’의 값을 보여준 세력이 차베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차베스 평가의 강한 설명력은 입증된 바 있다.

다음 절들에서는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이 확인된 차베스평가와 이념지향을 중심으로 국유화의견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겠다.

차베스 등 행위주체들의 평가 효과

차베스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국유화 과정과 관련된 다른 사회정치적 행위주체들에 대한 평가도

13) ‘계층더미’ 변수는 주부, 비취업자 등 계급위치를 규정할 수 없는 사례들이 계층위치 변수의 역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한 모조변수(dummy variable)이다.

국유화의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느 행위주체의 입장을 수용하고 동일시하는가에 따라 해당 행위주체가 국유화 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역할 및 입장과 동일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유화의 핵심적 추진 주체인 차베스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 추진, 연대, 저항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야당, 자본가,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의 효과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기관평가가 국유화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4개 기관의 평가 모두 .10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특히 차베스평가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베스와 노동조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은 국유화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야당과 자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은 국유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국유화의견에 대한 기관평가의 효과

설명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06	.023		-21.859	.000
차베스평가	.469	.031	.484	15.037	.000
야당평가	-.100	.033	-.086	-2.981	.003
자본평가	-.067	.037	-.054	-1.783	.075
노동평가	.074	.037	.064	2.005	.045

각 행위주체의 국유화의견에 대한 결정력은 각 기관의 평가 효과와 해당 기관의 긍정적 평가 정도가 산출하는 상호작용효과의 크기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행위주체들에 대한 평가의 분포도 중요하다. 표 6에서 보듯이 긍정적 평가를 가장 크게 받는 행위주체는 자본이고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주체는 야당으로서 국유화에 반대하는 행위주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반면 국유화를 추진하는 주체들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으며 차베스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반면 노조는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정치부문에서는 차베스가 야당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반면, 경제부문에서는 자본이 노동에 비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기관평가의 분포(%)

구 분	차베스평가	야당평가	자본평가	노조평가
부정적	28.6	34.3	11.7	28.4
중립적	34.1	50.6	56.2	51.7
긍정적	37.3	15.1	32.1	2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긍정-부정	8.7	-19.2	20.4	-8.4

국유화 과정은 차베스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친차베스 노동진영이 연대하는 반면, 국유화로 인해 기업을 점유당하는 자본가들이 가장 강렬하게 저항하며 야당은 자본의 저항에 연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국유화 정치의 핵심에는 차베스정부와 자본의 극단적 대립구도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차베스평가와 자본평가의 분포 및 효과가 국유화를 둘러싼 국민여론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차베스와 자본에 대한 상대적 평가 측면에서 보면 9개 칸을 상대적 선호도에 따라 3개 블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베스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친차베스블록이 22.5%, 자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친자본블록이 29.8%, 차베스와 자본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중도블록이 47.7%로 구성되어 있다(표 7 참조). 친자본블록은 친차베스블록에 비해 7.3% 차이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 지형이 국유화 정책에 다소 불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양자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중도블록이 전체 시민들의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은 탈이데올로기적 실용주의가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해관계와 쟁점사항에 따라 지지 대상을 바꾸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지니는 한편, 행위주체들로부터 지니는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해 객관적 판단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여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7. 차베스평가와 자본평가의 교차분포(%)

구분		차베스평가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합계
자본평가	부정적	8.3%	1.4%	2.1%	11.9%
	중립적	14.3%	23.2%	19.0%	56.5%
	긍정적	5.6%	9.9%	16.2%	31.7%
	합계	28.2%	34.5%	37.3%	100.0%

기관평가 교차범주들의 국유화의견을 보면, 표 8처럼 차베스블록과 친자본블록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중도블록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대각선에 위치한 중도블록을 보면, 양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집단이 국유화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고, 부정적 평가를 하는 집단이 국유화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차베스평가가 자본평가에 비해 국유화의견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이 더 크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8. 차베스평가와 자본평가에 따른 국유화의견

구 분		차베스평가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합계
자본평가	부정적	-.9082	-.8235	.6400	-.6214
	중립적	-.9704	-.6387	.0179	-.5022
	긍정적	-.9242	-.6410	-.0681	-.3984
	합계	-.9429	-.6471	.0159	-.4835

9개 집단들 가운데 국유화에 대해 분명한 지지 입장을 지닌 세력은 차베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이 유일하며, 그 크기는 2.1%에 불과하다. 반면 국유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지닌 세력은 차베스에 대해 부정적 혹은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6개 집단들로서 62.7%에 달하여 국유화 지지 세력에 비해 압도적 세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국유화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세력은 차베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본에 대해 중립적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개 집단으로서 35.2%를 점하고 있다. 국유화를 둘러싼 이러한 여론의 지형은 전반적으로 국유화를 반대하는 가운데 차베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들만이 중립 혹은 지지의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자본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여부로 중립과 지지의 입장이 갈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기관평가의 분포와 기관평가의 효과는 국유화의견에 대해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관평가의 분포 측면에서 보면 차베스와 자본의 대립구도에서 시민들은 자본측에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국유화 정책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에 불리한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반면 기관평가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국유화의견에 대한 차베스평가가 자본평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다. 이러한 현상이 함의하는 바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본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는 야당이 자본가와 거의 모든 정치경제적 사안들에서 공동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야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자본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행위주체가 취하고 있는 입장보다 행위주체 자체의 신뢰도에 근거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가가 차베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유화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본가의 사회적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것이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높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 문제가 자본가 평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자본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자본가평가의 취약한 효과는 국유화의견에 대한 결정력을 서로 상쇄하며 자본가들이 국유화의견 형성을 주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념적 성향과 국유화의견

이념지향에 있어 보수성향 시민은 59.5%로서 진보성향 시민 24.1%의 두 배가 넘는다(표 9 참조). 이러한 보수성향 지배의 이념적 지형은 국민적 합의를 보수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국유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의 구조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다.

표 9. 이념적 성향의 분포

이념지향	빈 도	퍼센트
보수성향	773	59.5
중도성향	214	16.5
진보성향	313	24.1
합 계	1300	100.0

국유화 반대 여론이 보수편향 이념 지형에 기초해 있다는 현실은 국유화 반대 여론을 지지 여론으로 바꾸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국유화 반대 여론이 65.5%로서 찬성 여론 17.5%에 비해 48.0%의 우위로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평등 척도의 이념적 분포에 비해 국유화를 둘러싼 여론이 훨씬

더 기득권과 지배질서 유지의 경향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평등 척도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기초한 부의 재분배 원칙을 준거로 하는 반면, 국유화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핵심 전제인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보수성향보다 진보성향에서 국유화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표 10처럼 진보성향 시민들 속에서도 국유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49.8%로 절반에 달하여 찬성의견 30.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차베스정부가 국유화에 친화적 성향을 지닌 진보진영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이념적 성향과 국유화의견의 교차 분포(%)

		이념지향			전 체
		보수성향	중도성향	진보성향	
국유화 의견	반대	74.8%	54.7%	49.8%	65.5%
	중립	11.9%	31.8%	19.8%	17.1%
	찬성	13.3%	13.6%	30.4%	1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표 11. 이념지향 범주별 기관 평가 및 국유화의견

이념지향	차베스평가	자본평가	국유화의견
보수성향	-.0191	.1961	-.6145
중도성향	-.0105	.1551	-.4112
진보성향	.4079	.2543	-.1949
전 체	.0879	.2038	-.4800
사례수	1229	1202	1300
진보성향-보수성향	0.4270	0.0582	0.4196

이념적 성향에 따른 정치적 태도를 보면 진보-보수 집단간 차이는 차베스 대통령 평가와 국유화의견에서는 .42 정도로 크게 나타남으로써 세 변수들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표 11 참조). 이는 진보적 성향이 강할수록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변혁적 정책을 추진하는 차베스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거나 침해하

는 국유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한편, 차베스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국유화를 포함한 차베스정부의 변혁정책에 지지를 보낼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자본가 평가는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자본가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은 자본에 대해 탈이념적으로 실용적 평가를 내리는 경향성을 반영한다.

세 변수들이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이념지향과 차베스평가의 교차분포에 따른 국유화의견을 보면, 국유화를 지지하는 세력은 차베스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들 가운데 진보 혹은 중도의 이념적 성향을 지닌 두 집단에 불과하다(표 12 참조). 나머지 7개 집단들은 모두 국유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강한 반대는 차베스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세 집단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차베스정부에 대해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집단들도 차베스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들에 비해 국유화 반대의견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여전히 강한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보수성향 집단이 중도-진보성향 집단들에 비해 더 강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12. 이념지향과 차베스평가에 따른 국유화의견

구 분		차베스평가			전 체
		부정적 평가	중립적 평가	긍정적 평가	
이념 지향	보수성향	-.9648	-.7373	-.1157	-.6117
	중도성향	-.8545	-.5301	.2075	-.4188
	진보성향	-.9000	-.5100	.1829	-.1875
	전체	-.9402	-.6420	.0283	-.4768

차베스정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국유화에 대한 의견 분포가 대별된 다음 이념적 성향의 차별성이 편차 내 편차를 설명하는 것은 이념지향에 비해 차베스평가가 국유화의견에 대한 결정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¹⁴⁾ 이는 표 4에서 확인한 국유화의견의 회귀분석 결과와도 상응하는 현상이다. 이처럼

14) 차베스평가와 이념지향에 자본평가 설명변인을 추가한 국유화의견의 회귀분석의 결과 .05 수준에서는 세 변수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자본평가는 .01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써 다른 두 설명변인에 비해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차베스정부 평가가 국유화의견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설명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 국민여론 속에서 국유화를 추진하는 차베스정부로서는 국유화 지지도보다 더 높은 차베스의 지지도가 국유화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차베스는 변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대세력을 설득·견인하기보다 지지세력의 지지를 강화하는 “친구 아니면 적”(amigo-enemigo)이라는 양분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차베스에 대한 지지를 국유화를 포함한 변혁정책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 지지의 전이(transfer of commitment)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¹⁵⁾

토론 및 맺음말

국유화에 대한 국민여론의 분포와 인과적 설명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국유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분석한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유화 여론은 반대의견이 거의 2/3 수준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반대의견 규모가 찬성의견의 네 배에 가깝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차베스의 자본주의 적극 지지층 10% 미만 주장이 경험적 근거를 지니지 못했으며 국가-자본의 대립구도 속에서 전개되는 국유화의 정치가 국유화를 반대하는 자본층에 유리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시민들의 국유화의견은 국유화 정치의 행위주체들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국유화 추진 주체의 정점에 있는 차베스가 야당에 비해 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유화 반대 세력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기관평가의 분포에서는 시민들이 차베스에 비해 자본층에 더 우호적이지만, 기관평가의 효과에서는 차베스평가가 자본평가보다 국유화의견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기관평가의 분포와 기관평가의 효과가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유화의견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력에서는 자본층의 우위가 사라지게 된다.

셋째, 다양한 설명요인들 가운데 차베스평가와 이념지향이 국유화의견에

15) 차베스의 양분전략의 내용과 설명에 대해서는 조돈문(2010)을 참조할 것.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차베스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국유화 반대의견으로부터 상당한 이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다음 이념지향에 따라 차베스에 대한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내부에서 진보적 성향은 국유화 지지로, 보수적 성향은 국유화 반대로 재편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차베스평가가 이념지향보다 더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베스정부의 국민여론 형성 실패

식품산업 국유화 조치에 대한 압도적 반대의 국민여론 분포는 국유화 정책이 국민적 합의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차베스와 정부가 국유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추진했다라도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차베스의 자본주의 적극 지지층 10% 미만 발언은 국유화 정책의 추진 주체도 국유화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며, 그런 점에서 부정적 국민여론은 차베스정부의 국민여론형성 실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차베스정부의 실패는 차베스정부가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제시한 정당화 근거들에 국민여론이 공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첫째, 국유화 대상 선정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 유린 문제는 방대한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에 비해 식품산업 대기업을 포함한 국유화 대상기업들의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 보장 정도가 가히 특전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둘째, 국유화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시장독점 해체 문제는 독과점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독과점기업의 국유화는 소유권만 사적 자본에서 국가로 바꿀 뿐 해당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이미 정부가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부문들도 많기 때문에 국유화 자체가 독과점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독점에서 공적 독점으로 소유주체만 바꿀 뿐 시장독점 기업에 대한 징벌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견인하기 어렵다. 셋째, 정부는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국유화된 기업들이 사적소유 시기에 비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이 국유화의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했고, 생필품의 유통을 위해 신설된

국유기업 PDVAL이 보인 무능과 부패는 시민들이 지닌 국유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보강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국유화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의 형성은 국유화 정책 자체가 가져오는 긍정적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국유화 조치는 이윤추구에 매몰된 기업경영 방식을 폐기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경우 국민들을 위해 먹거리의 질과 양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국유화 조치의 목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식량주권을 위해 창설된 PDVAL과 기간산업의 국유화 기업들이 식량주권과 사회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지 못했거나 국유화 조치의 진정한 동기는 식량주권이나 사회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차베스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보수성향의 자본진영을 제어하기 위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동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유화 조치는 성공했던 성공하지 않았건, 대상 업체들을 공동경영 혹은 노동자 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만,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나 동의를 유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유화 추진주체의 전략적 선택과 향후 전망

차베스정부의 국유화 지지 국민여론 형성 실패는 차베스와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 국유화 의견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변인이 차베스정부 평가이며 국유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보다 차베스에 대한 지지도가 월등히 높다는 현실은 차베스정부가 국유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원이 차베스의 높은 지지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베스와 정부가 국유화에 반대하는 시민들 전반을 대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며 국유화에 대한 지지를 견인하기보다 국유화 정책에 반대하는 차베스 지지자들에게 차베스정부의 국유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국유화 추진주체의 전략적 선택은 차베스와 정부가 각종 변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양분전략으로서 차베스에 대한 지지를 차베스정부가 추진하는 변혁정책들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양분전략은 차베스 지지자들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설득의 논리(logic of persuasion)보다는 동원의 논리(logic of mobilization)에 의존하게 된다. 대통령 차베스가 국유기업 노동자

들에게 공장내 노동자 통제를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장할 것을 촉구하고, 부통령 하우아는 국유화 조치에 대한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국유화 지지 집회의 동원과 노동자 참여를 호소하는 데서 국유화 추진주체들이 동원의 논리에 대해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분전략과 동원의 논리가 차베스 지지자들의 지지를 강화하는 효과는 가져오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차베스정부에 의해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규정되는 반대파들은 차베스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여 차베스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거부감으로 키워갈 수 있다. 또한 차베스에 대해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의 시민들은 내부자인 친구 진영으로부터 배제되어 외부자인 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국유화를 포함한 차베스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부정적으로 편향된 관점에서 접근하기 쉽게 된다. 그 결과, 시민들의 전반적인 보수 의식과 자본가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구조적 조건 속에서 정부의 국유화정책은 차베스에 대해 중립적 평가를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며 국유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지 못하고 차베스정부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

이처럼 차베스와 정부가 국유화 정책 등 변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택한 양분전략과 동원의 논리는 베네수엘라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어렵게 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유화 대상이 기간산업의 수준을 넘어 Polar 등 식품산업 초대형 기업집단으로 확대되며 국가-자본의 대립 구도가 더욱더 첨예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차베스정부의 국유화정책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를 차베스와 정부가 익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혁정책에 대한 낮은 국민적 지지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차베스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변혁정책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고자 양분전략과 동원의 논리를 선택한 것이다. 결국 차베스와 정부가 국유화 등 변혁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 사회는 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변혁정책 추진주체의 전략적 선택이 변혁정책 추진을 위한 의도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차베스와 정부의 변혁정책 추진 전략 및 그 함의는 국민여론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Abajo firmantes(2010), “Proponemos ante la expropiación de Agroisleña,” 2010.10.15, www.aporrea.org
- Albrecht, Hermann(2009), “Chavez Calls on Workers to Push for Workplace Democracy in Venezuela,” In *Defence of Marxism*, 2009.05.29.
- Canova González, Antonio, Luis Alfonso Herrera Orellana and Karina Anzola Spadaro(2009), *Expropiaciones o vías de hecho?: La degradación continuada del derecho fundamental de propiedad en la Venezuela actual*, Caracas: Fundación Estudios de Derecho Administrativo.
- CCURA(2006), “Declaración de Caracas: Congreso y elecciones democráticas en nuestra Central,” 2006.02.20, www.aporrea.org
- Cho, Don-Moon(2010), “Venezuela Chávez JeongGwonGwa BoolAnJeongSeongUi JeongChi(Chávez Regime and the Politics of Instability in Venezuela),” *GyungJaeWaSaHoe*(Economy & Society), No. 85, pp. 183-210.
- _____ (2011), “Venezuela GongDongGyungYeongUi JeongChiWa Haeng WijooCheDeulUi JeonRyak(Social Actors’ Strategies in the Venezuelan Comanagement Experiment),” (unpublished manuscript).
- Cruelles, Josep(2010), “Worker Control, and Self-management,” 2010.07.19, www.Kaosenlared.net.
- Fuentes, Federico(2008), “The Struggle for Industry to Serve the Venezuelan People,” *Green Left Weekly*, 2008.09.01.
- _____ (2009a), “When the Working Class Roars, Capitalists Tremble,” *Green Left Weekly*, 2009.06.01.
- _____ (2009b), “Class Struggle Heats up over Battle for Workers’ Control,” *Green Left Weekly*, 2009.07.26.
- Janicke, Kiraz(2007b), “Without Workers Management There Can Be No Socialism,” 2007.10.30, Venezuelanalysis.com
- Lanz, Carlos(2005), “El socialismo y la cogestión revolucionaria,” 2005.10.04, www.aporrea.org
- _____ (2007), “Balance y perspectivas de la cogestión en ALCASA,” 2007.05.10, www.aporrea.org
- Larsen, Patrick(2010), “Chávez Appoints Workers to Lead Factories in Guayana,” 2010.06.02, Venezuelanalysis.com
- Navarro, Willmaly(2010), “Expropiaciones de empresas son negativas para el país opinan neoespartanos,” 2010.06.08, www.elsoldemargarita.com.ve
- Pearson, Tamara(2010), “Worker Self-Management Introduced in Primary Industry Companies in Guayana, Venezuela,” 2010.05.16, Venezuelanalysis.com
- Peralta H., Moravia(2008), “La co-gestión o la democracia del proletariado,” 2008.02.08, www.aporrea.org
- Reardon, Juan(2010a), “Venezuelan Workers March for More Participation and

- More Rights,” 2010.11.11, Venezuelanalysis.com
- _____(2010b), “Venezuelan Steel Company and Housing Developments Nationalized,” 2010.11.01, Venezuelanalysis.com
- Wilpert, Gregory(2011), “An Assessment of Venezuela’s Bolivarian Revolution at Twelve Years,” 2011.02.02, Venezuelanalysis.com

일간지 등 언론매체 및 웹사이트

acn.com.ve

Economist

El Nacional

El Universal

Venezuelanalysis.com

www.acienpol.com/CIJ

www.aporrea.org

www.elsoldemargarita.com.ve

www.globovision.com

www.gobiernoenlinea.ve/docMgr

www.Kaosenlared.net

www.tsj.gov.ve/legislacion

www3.dinero.com.ve

Article Received: 2011. 10. 03

Accepted: 2011. 11. 01